

보도 일시	2023. 2. 26.(일) 12:00 2023. 2. 27.(월) 조간	배포 일시	2023. 2. 26.(일)
담당 부서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일훈 (044-202-7404)
		담당자	사무관 신용범 (044-202-7410)

조선업, 반도체, 뿌리산업, 농업 등 지역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더 지원(PLUS) 해드립니다

- 23년 지역형 플러스사업,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총 819억원 규모 추진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신청한 2023년 지역형 플러스(PLUS)사업,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사업을 민간전문위원회(총 15명)를 통해 심사하고('23.2.10.) 지원예산을 확정했다.

동 사업은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정책*을 발굴하여 제안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선정·심사하는 공모사업이다.

* 자치단체는 ①교육·훈련, ②취업연계, ③기업지원, ④창업·창직지원 사업 등을 자유롭게 설계, 재정자주도에 따라 10~30%의 지방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지역형 플러스(PLUS)사업에 348억원, '20년부터 추진해오던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사업에 471억 원 등 총 819억 원을 지역별·산업별 일자리사업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① 「지역형 플러스(PLUS)사업」

지역 주력산업의 구인난 해소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형 플러스(PLUS)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여, 자치단체가 설계한 조선업, 반도체, 뿌리산업, 농업 등 산업별 일자리사업을 우대(PLUS)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 ▲ 지역고용전문위원회('22.12.9.)를 통해 지원대상 산업 선정
- ▲ 조선업 148억, 반도체 60.5억, 뿌리산업 60억, 농업 55억, 기타 24.5억원 지원 확정

「지역형 플러스(PLUS) 사업」은 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게 기존 중앙정부의 일자리사업 지원수준을 높이거나 지원요건을 확대하는 등 지역과 중앙의 정책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된다.

- * 자치단체가 중앙일자리사업에 '자치단체 지원예산'을 추가(PLUS)하여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게 사업을 개발·시행하는 사업(1년 단위 사업, '23~)

첫째, 최근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조선업 등 국가기간산업에 청년 등의 취업촉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일자리사업을 조선업 특성에 맞게 특화하여 사업을 설계·시행한다.

조선업의 높은 입직 연령, 짧은 근속기간, 사내 협력사 간 잦은 이동 등 산업의 특성에 맞춰 내일채움공제사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지원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공제금 지급요건인 근속기간을 줄여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사례1) 조선업 구인난 개선 지원(경남 거제, 전북 군산 등)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지원대상 확대(PLUS) 등 조선업 특성에 맞게 요건 완화
↳(연령) 34세 → 폐지, (사업장 이동) 불가 → 허용, (공제금 지급) 납입 후 2년 → 1년
- 대기업 기술연수원을 통한 협력사 지원 훈련 시, 훈련수당 등 추가(PLUS) 지원
↳(훈련수당) 월 20 → 월 100만원

둘째, 반도체산업의 중견·중소기업은 기계·장비기술인력 부족, 낮은 임금에 따른 단순생산직의 잦은 이·전직으로 상시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반도체산업으로 양질의 지역인재 유입 및 충실한 훈련참여 유도를 위해 훈련수당, 훈련비, 훈련 기반시설을 추가 지원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연령과 최저임금 요건을 높여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조건도 개선한다.

(사례2) 반도체(충북, 경기 등)

- 반도체 인력양성 훈련 시, 훈련수당 및 취업장려금 등 추가(PLUS) 지원
↳(훈련수당) 월 20 → 월 50만원
(취업장려금) 2개월 근속 시 월 50만원, (강사료, 실습재료비) 추가 지급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대(PLUS) 지원
↳(장려금) 월 60 → 월 80만원 (연령) 34 → 39세, (임금요건) 최저임금 100 → 120%이상 시 지급

셋째, 뿌리산업은 저임금,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청년의 취업 기피, 재직자의 고령화 등으로 만성적 인력 부족을 겪는 점을 반영하여, 뿌리산업의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의 지원연령, 최저임금 요건을 확대하고 장려금 수준을 높였다.

아울러, 현장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특화훈련 참여자에게 훈련장려금 수준을 높이고, 훈련이수자가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취업장려금을 추가 지원한다.

(사례3) 뿌리산업 구인난 개선 지원(광주, 인천 등)

- 신중년 미취업자 채용 시, 지원대상 확대 등 우대(PLUS) 지원
↳(장려금)월 80만원 → 월 100만원, (연령)50세 이상 → 45세 이상,
(임금요건) 최저임금 → 최저임금의 120% 시 지급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시, 훈련장려금 및 구직활동비 등 우대(PLUS) 지원
↳(훈련장려금) 월 11.6 → 월 50만원, (취업장려금) 1년 최대 240만원, (구직활동비) 20만원

넷째, 농업생산과 농업인력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도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농번기 농촌’의 일손 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인근 도시 구직자와 농촌을 연결하는 일자리정보 제공, 취업알선에서 근로계약 체결까지 지원하며, 안전교육, 보험료 및 보호장비 지급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한다.

(사례4) 농촌 구인난 개선 지원(경북, 전북 등)

- 자치단체·고용부(지방관서) 중심 농촌인력중개센터(농촌)-중장년일자리센터(도시) 등으로 일자리협의체 구축, 도·농간 내국인 인력매칭 효율화
- 온라인 농가 일자리 정보시스템 ‘농가일모아’를 도농인력중개플랫폼으로 통합하여 실시간 농가 일자리 정보제공-구인·구직-취업알선-근로계약체결까지 원스톱(one-stop) 지원
- 안전한 일터(교육·장비·보험 등), 취업자 권리보호(온라인 근로계약서 작성), 근무여건 개선(교통편의, 숙박비, 식비 등), 작업교육 등 현장지원 강화

②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한편, 고용위기가 예상되는 지역의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고용위기 발생을 예방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10개 권역 광역-기초자치단체 컨소시엄의 일자리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 * 자치단체가 지역의 고용위기산업을 선정하여 지역 경제·산업과 연계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주도적으로 설계·실시(최대 5년 한도 지원, ‘20년~)
↳경기, 인천,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광주, 경북, 울산, 부산 등 10개 광역-기초단체 컨소시엄 지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지역의 노동시장 안정을 위해 고용 위기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신성장 산업을 발굴하여 지역 내 산업전환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광역-기초자치단체 컨소시엄의 사업내용에 따라 연간 40~140억을 지원한다.

(사례5) 서부산권 위기대응 및 고용안정 지원(부산)

- (위기)서부산 기계부품(자동차, 조선) 산업 고도화를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위기산업 이·전직자에 대한 지역 일자리센터 취업지원서비스 및 훈련프로그램 운영
- (신성장)전기차 부품 클러스터와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사례6) 내연 자동차부품산업 일자리 플랫폼 사업(울산)

- (위기)자동차부품산업 퇴직자에 대한 전직훈련, 취업지원 연계 및 장려금 지원
- (신성장)제조혁신 품질검사 자동화 전문인력, 스마트팩토리SW 구축개발 전문인력, 수소차 및 수소에너지분야 전문인력,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례7) 경기 정원권 섬유제조업 新르네상스(경기)

- (위기)섬유산업 기술고도화, 전문인력 양성 및 경기북부 패션디자이너 창업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지원
- (신성장)스마트공장, 패션마케팅 분야 디지털·융합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고용노동부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자치단체가 직접 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이는 최근 경기상황에서, 조선업, 반도체산업 등 주요 산업의 심각한 구인난을 완화하고 지역의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올해는 자치단체가 지역과 중앙의 정책 연계하여 지역·산업에 특화하여 중앙의 정책을 우대(PLUS)하여 지원하는 「지역형 플러스(PLUS) 일자리 사업」을 신설한 만큼, 자치단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며 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붙임1

지역형 플러스(PLUS) 사업 개요

- **(개요)** 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기존 중앙사업의 지원수준을 높이거나, 지원요건 등을 변경(PLUS)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 지원
 - 이를 통해 전국 공통기준의 중앙사업이 지역·산업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작동 → 지역의 일자리창출 극대화
 - 또한, 지역에서 집행되는 중앙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 제고 및 중앙정부·지방관서와 자치단체간 정책협업·소통 활성화 기대
- **(대상지역)** 사업역량 등 고려, 17개 광역단체 대상 공모·선정
 - * 기초단체는 소속 광역단체와 컨소시엄 통해 참여 가능
- **(운영프로세스)** 사업공모·선정 → 약정 체결 → 사업추진 → 평가

① 사업공모 및 선정
(고용부, 전년 12월~2월)

→

② 약정 체결
(고용지청-자치단체, 2월)

→

③ 보조금 신청 및 교부
(고용지청→자치단체, 2월)

↓

④ 사업 실시
(자치단체, 2~12월)

→

⑤ 지도·점검
(고용지청, 반기 1회)

→

⑥ 사업 평가
(외부평가기관(위), 12월)
- **(예산)** 348억원
 - * 자치단체는 재정자주도에 따라 20~30% 예산매칭
- **(세부사업)** 자치단체 공모사업으로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자치단체의 사업설계 및 선정결과에 따라 지역별 세부사업 내용 구체화

「지역형 PLUS 일자리사업」 개념도



붙임2
‘23년 지역형 플러스(PLUS) 사업 주요 내용

지역	주요 신청 내용	국비 (억원)
		348
인천	(뿌리) 인천뿌리내일채움공제, 경력이음채움공제 (반도체) 인천반도체내일채움공제, 경력이음채움공제	19
경기	(반도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우대	13
대전	(반도체) 청년내일채움공제, 일도약장려금, 채용예정자훈련우대 (뿌리) 청년내일채움공제, 일도약장려금, 근로환경개선	13
충북	(반도체) 채용예정자훈련, 청년일자리도약, 청년내일채움공제 우대	30
충남	(반도체) 채용예정자 및 실업자훈련, 취업정착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대 (농업) 수요발굴, 일자리매칭, 협의체구성, 식비, 교통비	9
광주	(뿌리) 청년내일채움공제, 일자리도약장려금, 신중년적합 직무고용장 려금, 실업자훈련우대, 취업장려금	15
전북·군산완주·무주· 장수·고창·임실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일자리도약장려금 우대 (농업) 식비, 취업촉진수당, 교통비, 상해보험비, 플랫폼	30
전남·해남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일자리도약장려금 우대, 숙련퇴직자 재취업 지원금, 채용예정자훈련 우대 (농업) 중식·간식비, 촉진수당, 교통비, 숙박비, 상해보험, 플랫폼	33.5
제주	(관광) 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업자 훈련우대	6.5
강원	(관광서비스) 내일채움공제, 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우대	8
경북·영천·상주·문경· 의성·청송·청도	(뿌리) 내일채움공제, 고용촉진장려금, 실업자훈련, 채용예정자훈련 우대 (농업) 중식·간식비, 촉진수당, 교통비, 숙박비, 상해보험, 플랫폼	48
부산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일자리도약장려금 우대 (관광마이스) 내일채움공제, 일자리도약장려금	18
울산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일자리도약장려금, 숙련퇴직자재취업지원금 우대	27
경남·창원·통영·거제· 고성·진주·사천·김해 밀양·함안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일자리도약장려금 우대, 숙련퇴직자재취업지 원금, 채용예정자훈련 우대	78

□ 도입 경위

- 고용위기 도래 이후에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할 수 있으나,
 - 고용위기지역의 경우 위기발생이 현실화된 후에 지정할 수 있어 위기의 예방적 대응 곤란
- 이에, 고용위기 도래를 예방할 수 있는 지원제도 마련 추진('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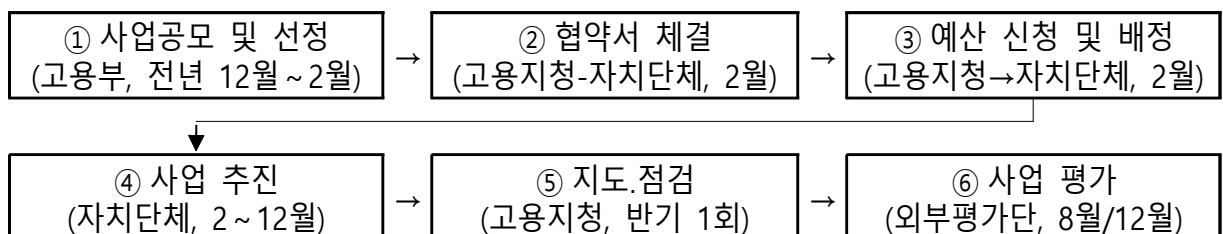
□ 사업목적 및 대상

- (목적) 고용위기가 예상되는 지역의 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고용위기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경제·산업정책과 연계한 중장기 일자리사업 추진
- (지원대상) 고용위기 정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역-기초 자치단체 컨소시엄 사업 선정
 - * (정량) 피보험자, 실업급여 신청자, 전력사용량, 생산지수 감소 정도
 - (정성) 취업자수, 제조업 가동률, 경기지수, 구인배율, 빈일자리를 등 종합적 검토
- (예산규모) '23년 513억(광역-기초 자치단체 10개 컨소시엄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내용) 취업연계, 교육훈련, 기업지원, 창업지원 등 패키지 지원
- (지원범위) 컨소시엄별 연 40~140억원 지원 → 최대 5년 한도 지원
 - * 자치단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총 사업비의 10~30% 지방비 부담

- (추진체계) 사업공모·선정 → 협약체결 → 사업추진 → 평가



지역		주요 사업내용	국비 (억원)
			471.4
'20	전북·익산·김제 ·완주	(위기) 자동차 부품업체 기업지원 및 전직지원 (신성장) 농식품, 전기차, 홀로그램 등 패키지형 지원	40
	경남·창원·김해 ·사천	(위기) 자동차, 조선 등 기업경쟁력 강화로 고용창출 선순환 (신성장) 미래자동차, 방위항공, 의생명 전문 인력양성 지원	73.6
	경북·구미·김천 ·칠곡	(위기) 전자산업 퇴직 전문인력 전직지원 (신성장) 스마트모빌리티 기술·사업화 및 일자리 확충	78.6
	인천·부평·남동 ·서구	(위기) 뿌리산업 기술혁신 컨설팅·공정자동화·근로환경개선 및 맞춤형 취업지원 등	35.6
	충북·청주·진천 ·음성	(위기) 전자부품, 반도체 근로자 이전직 패키지 취업지원 (신성장) 식품, 신에너지, 첨단뿌리산업 기업지원 통한 고용확대	41.0
'21	부산·사상· 사하·강서	(위기) 부품산업(자동차, 조선) 고도화 통한 미스매치 완화 (신성장) 전기차 부품 클러스터와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55.6
	울산·북구·울주	(위기) 내연 자동차 부품업체 경쟁력 확보, 직무향상 훈련 (신성장) 미래차(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차) 인력양성 등	52.0
	광주·광산·북구	(위기) 자동차, 가전산업 신산업 전환 및 이전직 지원 (신성장) 전기차, 공기산업 사업화 및 취업지원	40.0
	충남·보령·아산 ·서산·당진	(위기) 석탄화력, 자동차산업 인력 전환 배치 등 이전직 지원 (신성장) 풍력발전, 수소에너지 인력양성, 취업지원	24.0
'22	경기·양주·포천 ·동두천	(위기) 섬유산업 직무향상 훈련 및 인력 재 배치, 이전직 지원 (신성장) 첨단소재, 디자인, 디지털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31.0